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소위' 잡혔다

✎ 김한주 기자 | ⓒ 승인 2020.12.23 18:36

법안소위, 6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상정

“소위 조율 과정서 법안 후퇴 경계해야”

오늘 '1천명 동조단식' 국회 압박

제383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0. 12. 24.(목) 10:00

연번	의안번호	건명	국회제출일	법사위회부일	소위원회부일	담당전문위원(조사관)
1	210037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4인)	2020. 6.11.	2020. 6.16.	2020. 8.25.	허병조전문위원 (임주현 T5 052)
2	2105290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등 45인)	2020.11.12	2020.11.13.	2020.11.16.	허병조전문위원 (임주현 T5 052)
3	210542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의원 등 11인)	2020.11.17.	2020.11.18.	2020.11.24.	허병조전문위원 (임주현 T5 052)
4	210601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0.12. 1.	2020.12. 2.	2020.12.23.	허병조전문위원 (임주현 T5 052)
5	2106436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범계의원 등 12인)	2020.12.14	2020.12.15.	2020.12.23.	허병조전문위원 (임주현 T5 052)
6	2100013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0. 9.22	2020. 9.22	2020.11.16.	허병조전문위원 (임주현 T5 052)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국회가 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룰 예정이다.

소위에 오른 법안은 국민 10만 명의 청원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국민의힘 임이자 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안, 박범계 안, 이탄희 안이다. 소위가 6개 안을 조율해 최종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율안이 소위를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간다.

국민의힘의 소위 참석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 후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측은 법 제정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고, 민주당 법사위 측은 제정안의 조항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손 볼 규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왼쪽부터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 © 김한주 기자

13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고 김용균 어머니와 고 이한빛 아버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안 후퇴에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 이한빛 아버지는 “법안의 조항 하나 하나는 죽음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함부로 조항을 덜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입법을 위한 국민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3일 민중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천 명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단식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유족만 단식하도록 둘 수 없다는 민중이 속속 동조단식에 참여하면서 그 숫자가 늘고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일 수 없다. 민주당은 초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천 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김한주 기자

한편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투쟁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30일 '1만인 동조 단식'과 국회 앞 분산 촛불, 드라이브스루 행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족과 노동자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면서 법안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여의도 일대에서 분산 촛불 시위를 진행했다. © 김한주 기자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